여야, 쟁점법안 충돌 예고…오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

尹 거부권 행사했던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상정
국힘, 무제한 토론 방침…범여권 '살라미'식 순차적 처리 전략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본회의 토론 발언을 통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언론과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는 방송3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았으나 대외적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야 하는 의견도 대두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래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니 굳이 뒤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살라미식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4일 상정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급격한 여론 변화가 없는 한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계속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송언석 원내대표)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주진우(왼쪽부터)·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 당 대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탄 vs 찬탄' 국힘 대표 컷오프 득표전

5~6일 예비경선 1명 탈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1차 관문인 예비경선(5~6일)을 통과하기 위해 3일 총력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 50% 반영되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1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 측 후보는 민심을 겨냥한 쇄신을 주장하는 반면 반탄(탄핵 반대) 진영은 당심을 토대로 '강한 야당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반탄파 선두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잘 싸우는 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의 인적 쇄신 주장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반탄파 세력이 대표가 되면 보수 쇄신은 물 건너가고 나아가 정당 해산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온건 지지층과 함께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반혁신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국민의힘이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띄우면서 안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초선으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주진우 후보는 양쪽 진영 모두를 비판하며 무계파 중도 노선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까지는 반탄파가 당권 레이스 초반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원 투표가 80%(일반 여론조사 20%)나 반영되는 본선과 달리 예비경선에는 민심도 절반이 반영되기에 쇄신파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예비경선에서 찬탄파나 반탄파 후보 중 1명이 컷오프될 경우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찬탄 대 반탄의 대결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경태 후보는 이미 안 후보와 주 후보에게 이른바 '반극우연대'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다. 예비경선 결과는 7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이달내 시행규칙 개정…尹 정부 신설 '경찰 조직 독립 저해' 논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하지만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컸다.

/연합뉴스

與 '대주주 기준' 커지는 공방

50억→10억 세제 개편…김병기 "재검토" 의견에 진성준 "반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지난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식 시장이 전날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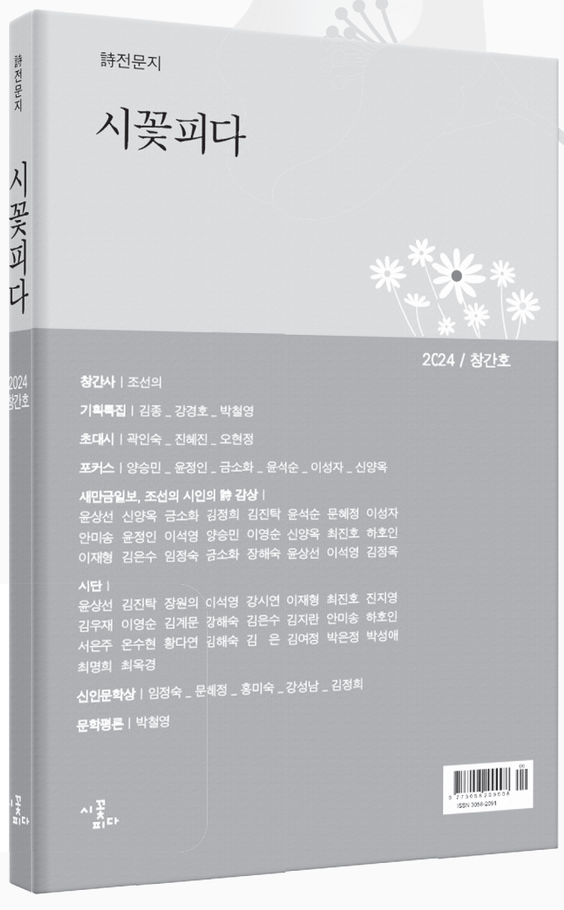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